

보도일시

2026. 9. 7.(월) 배포시

배포일시

2026. 9. 7.(월) 13:00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왜곡 발언 규탄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실왜곡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 민주당, 농지조사 토대로 매도희망 농지매입, 위법농지 양성화 등 농정개혁 추진(계획)
-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업인 불편 최소화되도록 보완 추진(예정)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9.6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 사업’이 농업인의 농지를 빼앗고 농업인들의 삶을 짓밟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 장대표는 “정부가 고령 농업인이 질병으로 농사를 못 짓는 땅을 당장 팔라고 한다”고 발언했으나, 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농지법상 허용되며, 고령농의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다.
- 또한 “농지를 팔고 싶어도 농지은행은 좋은 농지 아니면 사주지도 않는다”는 지적도 농지은행 예산의 부족 문제에 따른 현상임에도 이를 농지조사의 문제로 건강부회하여 왜곡했다. 농지거래 절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국민과 농업인을 기망하는 장대표는 사실왜곡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농해수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강력히 규탄했다.

□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하고, 투기 등으로 인해 농지가 실제 농업인에게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연금 대기수요, 처분명령 대상농지의 매도희망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국회심의회단계에서 증액(반영)할 예정이다.

- 또한 오랜기간 동안 밭으로 개간되어 활용되는 임야(지목) 등 현재 이용용도와 지목이 상이한 농지를 양성화하고, 문중토지 등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발생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문제 등 농업계의 오래 묵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정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이에 앞서 정부는 7월 30일 농지 전수조사 방향을 설명하면서, 고령농의 불가피한 휴경 등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인 단속처분보다는 계도 등의 대안조치도 병행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농지전수조사가 단순한 단속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사에서 확인된 농촌의 현실을 바탕으로 농지 소유, 임대차, 휴경 등의 농지제도 전반적인 개혁이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 편성, 관련 법 제개정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했다.